

경기·인천 : 높아진 불확실성, 정책 연속성 ‘난제’

김 상 민 |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차장

6·2 지방선거의 결론은 ‘지방 권력 대이동’이었다. 수도권인 경우 민심은 한나라당 참패를 선택했다.

경기도는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한나라당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31개 시장·군수 가운데 19명은 민주당 차지가 됐다. 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 27석, 민주당 등 야당 79석으로 완벽한 ‘여소야대’의 모습이다. 거기다 교육감(김상곤)까지 진보 세력이다.

인천광역시시의 경우 시장(송영길)부터 구청장, 시의회까지 모두 민주당 일색이다.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모두 한나라당 일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완벽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이뤄졌다.

경기·인천의 권력 지도가 바뀌면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가 ‘정책의 연속성’이다. 김문수 지사의 경우 각종 공약을 실행하기까지 야당이 지배하는 도의회의 승인과 야당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반대 등 각종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한 듯 김 지사도 취임 일성으로 ‘겸손, 대화,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송영길 시장의 경우 안상수 전 시장이 추진했던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천은 재정 취약이라는 약점 때문에 각종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기·인천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로서는 이처럼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셈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권력 이동은 대대적인 공무원 인사를 의미한다. 특히 건설사

들은 기존에 닦아놓은 인맥이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기도의 핫이슈 GTX

김문수 경기지사가 발표한 공약을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다. △GTX 건설(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8조원(연장 구간 포함) △남양주 명품 신도시 조성 17조 1,000억원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 4조 8,55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서해안 골드코스트 사업으로 △전곡 해양산업단지·화성 요트허브단지 5년간 1조 4,256억원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성과 주변 인프라 구축 4조 6,940억원 △시화 반월산업단지 첨단화 5,647억원 △평택항 개발 및 국제물류기지 건설 1조 573억원 등도 있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협조가 절대적인 뉴타운 개발사업도 있다.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GTX는 총연장 174km의 대심도 급행 전철 3개 노선 건설을 말한다. 고양 킨텍스~화성 동탄 신도시(74.8km),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49.9km), 의정부~군포 금정(49.3km) 등 3개 노선(연장 구간 제외)의 총사업비는 12조원. 수도권 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놓을 대형 사업으로 비용뿐만 아니라 기대효과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뜨거운 이슈였다.

김 지사는 사업비의 경우 민간 7조 2,000억원(60%), 개발 부담금 2조 4,000억원(20%), 정부 1



조 8,000억원(15%), 지방자치단체 6,000억원(5%) 등으로 도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26만명, 생산유발효과 30조원, 개통 후 매년 1조 7,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창출 등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3개 노선이 동시 착공돼 2018년 완공되면 수도권 전역이 1시간 내 생활권이 되고, GTX 역을 중심으로 연계 도로망과 경전철·BRT(광역 급행버스)·버스·자전거 등 다양한 연계 교통 방법을 검토해 입체적 교통망을 갖출 계획이라며 국토부에 공을 넘겼다. 국토부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9월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아직 GTX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송영길 인천시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거리다. 김 지사는 송 시장이 반대하면 '인천은 안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인천을 제외하면 추진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뉴타운 사업 '빨간 불'

김문수 지사가 지난 4년 간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뉴타운 개발(재정비 촉진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주민들은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주민 재정착 문제 등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뉴타운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부천시 소사지구 등 12개 시 지역 23곳. 부천시 소사·원미·고강지구, 광명 광명지구 등 5곳은 촉진 계획이 결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에서만 한나라당 시장이 당선됐을 뿐 부천·고양·안양·평택 등 11개 시의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뉴타운 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시장이 먼저 뉴타운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당선자들은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 찬성하는 지역은 지원하되,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반발이 적지 않다. 금정역세권과 군포역세권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군포에서는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에 오물을 투척하고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평택 안정뉴타운 지역 주민들도 지난 4월부터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고 주민 재산권에 손해를 끼친다며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김포 뉴타운과 안양 만안뉴타운도 반발이 거세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측에서도 뉴타운 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인 만큼 반대 의견이 많으면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도는 2020년까지 23곳의 뉴타운 개발 지역에 24만 가구 93만 7,000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

었다.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재정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시공사의 경우 광고·동탄의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고 신도시 개발에 2조 2,000억원, 동탄2 신도시 개발에 9,000억원, 고덕 신도시 개발에 4,600억원을 차입하면서 매달 110억~120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셈이다.

김 지사가 아시아 최고의 해양레저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은 '서해안 골드코스트'의 경우 예산 때문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시군, 기존 사업 '발목'

기업들로서는 김문수 지사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도내 기초자치단체다. 전임 시장·군수들이 추진하던 각종 정책들이 잇따라 뒤집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월 12일 지급유예 선언(모라토리엄)을 했다.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끝나면 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는데 성남시 재정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선언한 것. 이 시장은 또 제1공단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을 밝히는 등 전임 시장 정책에 선을 긋고 있다.

안양시는 5월 3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1,292억원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최대호 시장이 재검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추진돼 오던 경전철 사업을 중단하고 중전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장항과 송포,

대화 등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2,816만㎡ 규모의 JDS(가칭)택지지구 개발사업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하남시도 중앙대 및 명품 아울렛 유치 등과 관련, 이교범 시장이 최선의 안을 찾겠다는 구성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추모공원, 김학규 용인 시장은 한국외대 영어마을, 김철민 안산시장은 안산 돔구장 사업을 재검토기로 결정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전철 사업 중지를 지시한 상황이다.

인천시 - 안상수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인천시 행정 권력은 모두 민주당으로 이동했다. 특히 송영길 시장은 전임 안상수 시장이 벌여 놓은 대부분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으며, 취약한 재정을 감안해 내실을 다질 것임을 밝혔다. '2025년 인천 도시기본계획'도 전면 재검토 중이다. 기업들로서는 사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송 시장은 일단 송도·청라·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전략적 의사결정 기구를 설립하고 사업 전반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법인의 입주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핵심 첨단 기업도 외국인 투자에 준하는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송 시장은 입주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와 글로벌 인재 고용의 확대를 위한 영종지구 무비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이익을 구도심 발전에 쓰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예산 절감, 전신 예산 폐지, 경제자유구역 이익 환수를 통해 도시 재창조 기금 3조원을 만들어 도시 재생과 재개발을 적극 지

원한다는 얘기다. 특히 재개발 등 도시 정비 과정에서 원주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우선시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 임대아파트 사전 물량 확보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새로운 도시 정비는 공공관리자제도와 공동체 개발 방식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제는 인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각종 대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 151층 인천타워, 송도아트센터, 영종 밀라노시티, 영종 브로드웨이 복합문화단지,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의 업무 지구가 축소되고 그 자리에 아파트만 들어서는 모습이었다.

신규 사업 ‘역부족’

실제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송 시장의 최대 두통거리다. 올해 3월 인천시가 공개한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는 3조 5,133억원. 검단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공사채 2조 4,100억원을 포함해 영종 하늘도시 1조 3,912억원, 운북 복합레저단지 3,000억원 등이다. 청라지구 내 아파트 건설과 검단 산업단지 조성 등의 자금도 공사채로 조달하였다. 하지만 송 시장측이 재검토한 결과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가 올해 연말에 6조 6,4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6월 말 기준으로 공사채 발행액은 6조 2,175억원으로 1조 6,585억원만이 상환된 상태다.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4조 5,590억원이지만 대부분 도시 개발과 주택 건설 등에 따른 부채여서 지금처럼 얼어붙은 부동산 환경에서는 쉽지 않다. 영종 하늘도시의 경우 용지 판매율이 30% 수준이고 되레 해약 사

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청라·영종지구는 물론 송도의 일부 아파트는 분양 시기마저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송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할 여력을 갖기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송 시장이 지방채 발행을 꺼리는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현실을 인정했다.

예컨대 송 시장의 당선으로 경인선 전철 지하화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인선 지하화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구로역 12km와 경인선 구로역~인천역 27km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선도 재검토 대상이다. 주경기장 신축은 현재 결정된 것이 없는 가운데 문학경기장 리모델링 방안이 제시된 상황이며, 송도 연장선은 151층 인천타워 사업 재검토에 따라 착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09년 6월 말에 2014년 개통을 목표로 151층 인천타워를 연결하는 연장선 공사(1,229억원)를 올 상반기 시행키로 확정했었다.

이처럼 대규모 정책 변화가 이뤄지면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예컨대 골프장을 추진하는 롯데·CJ그룹,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검단~장수간 도로 공사 등에 나선 포스코건설 등은 새로운 시장 출현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한 기업 관계자는 “지방 권력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가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라며 바뀐 행정 권력의 조속한 안착을 주문했다. CERIK